14-20호 2014.05.16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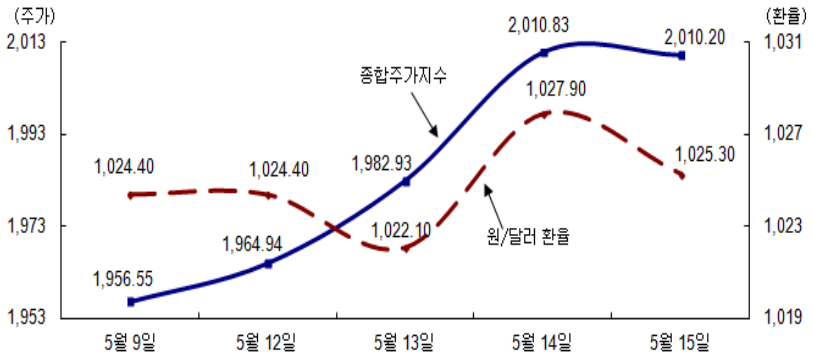
■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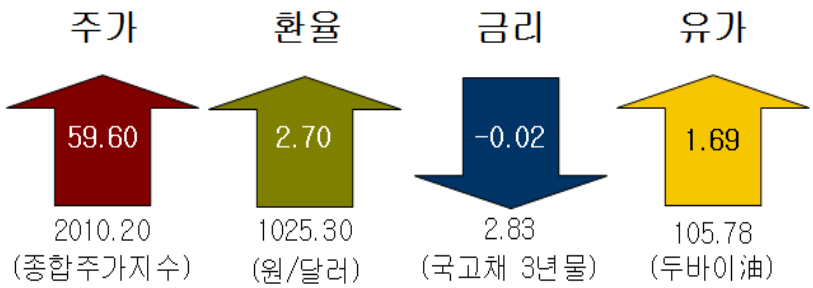
– 공급/수요 양방향의 고령화 대응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9~5.1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작 성 : 조 호 정 선 임 연 구 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 공급/수요 양방향의 고령화 대응 필요

■ 독일, 고령화에도 경쟁력 상승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국뿐인데 그 중 독일만이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고령 사회 평균 2.1%로 일본, 이탈리아에 비해 높았고,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성장 잠재력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초고령 사회 들어 개선됐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낮았다. 또한, 내수 기여도도 일본, 이탈리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외 경쟁력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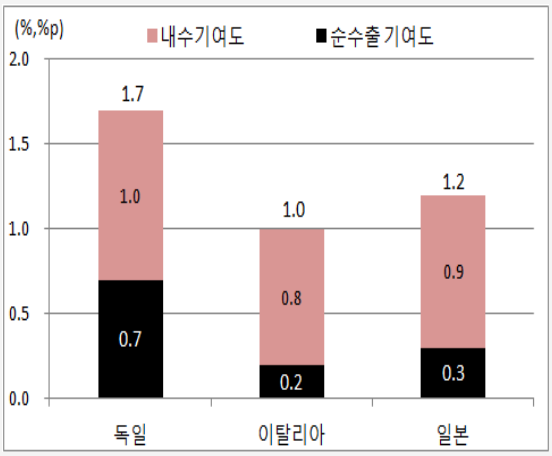
<초고령 국가의 경제성과 비교>

(기간 평균, %)

구분	국가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경제 성장률	독일	2.1	1.9
	이탈리아	1.7	-0.6
	일본	1.1	1.4
재정 수지	독일	-2.9	-1.3
	이탈리아	-2.9	-3.7
	일본	-6.0	-7.1
국가 부채	독일	57.8	77.1
	이탈리아	107.3	120.3
	일본	142.0	212.2

주: 초고령 사회 경제성장률은 2009년 제외.

< 경제 성장에 대한 내 · 외수 기여도 >



주: 1995~2013년 평균이며, 2009년은 제외.

■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을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성 및 정부 측면에서 일본, 이탈리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투입측면에서는 우선 고용·연금 개혁 지속으로 고령자·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제고하였다.** 독일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유연성을 제고했고 연금 수급 연령도 2007년 63세에서 65세로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려왔다. 이에 고령자와 여성 고용률은 고령 사회보다 초고령 사회에서 19.5%p, 11.2%p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하였다.** 독일의 총 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은 2010년 13.1%로 이탈리아 7.4%, 일본 1.7%에 비해 높고, 최근에는 '전문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외전문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둘째, 자본 투입 측면에서는 투자 여력이 높게 유지됐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증가했다. 독일의 가계 순 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9~10%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일본과 이탈리아는 2000년대 이후 급락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도 독일은 고령 사회 평균 270.4억 달러에서 초고령 사회 287.2억 달러로 6.2%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는 동기간 5.7%, 일본도 52.9% 줄었다.

셋째, 생산성 측면에서는 R&D 투자 확대와 투자 환경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시켰다. 독일의 R&D 투자는 고령 사회 연평균 2.3% 증가에서 초고령 사회는 2.7%로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일본은 2.5%에서 -0.1%, 이탈리아도 1.5%에서 -0.3%로 감소했다. 또한, 독일은 법인세률을 2007년 기존 39%에서 29%를 낮췄고, 인프라, 혁신 능력, 인력 교육 체계 등 투자 환경의 경쟁력도 일본, 이탈리아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정부 측면에서 볼 때 독일 정부는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재정 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도 동시에 달성하였다. 독일은 빠른 고령화에도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이 1980년 GDP대비 9.7%에서 2009년 9.1%로 감소한 반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동기간 7.4%p, 5.8%p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요 창출자로서도 EU 통합 강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고령화를 성장 동력화하는 '실버 경제(Silver Economy)'를 추진하고 있다.** 실버 경제는 고령 관련 제조·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시사점

독일의 고령화 대응 경험에서 볼 때 한국도 다음과 같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투입 부문에서는 우선, 고령자와 여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 증대 및 이들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해외전문인력의 유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투자 여력을 제고하고 투자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술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직업훈련 다양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양자 FTA, 범지역 FTA인 TPP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한국형 실버 경제' 추진 등의 신규 시장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문에서도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와 재정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및 조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도 필요하다.

1. 독일, 고령화에도 경쟁력 상승

○ 독일은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성장잠재력이 높게 유지되면서 차별화

-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국뿐임
  · 일본의 고령화(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는 2013년 기준 25.1%(OECD 평균, 15.9%)[1]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21.1%로 2위를 기록
  · 이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고령 사회[2]에, 2000년대 중후반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

- 독일은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경제 성장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고령 사회 평균 2.1%로 일본 1.1%, 이탈리아 1.7%에 비해 높았고,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평균 1.9%(2009년 제외)로 일본 1.4%, 이탈리아 -0.6%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유지

- 독일은 초고령 사회 이후 국가 경쟁력도 상승하면서 일본, 이탈리아와는 차별화
  · IMD에 따르면 독일의 국가 경쟁력은 1997년 16위에서 2013년 9위로 상승했지만 일본은 17위에서 24위, 이탈리아도 39위에서 44위로 떨어졌음
  · 특히, 빠른 고령화가 일본에는 장기 불황, 이탈리아는 재정위기 원인으로 작용

<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 >

(%, 연도)

	고령화 정도	고령 단계별 기간		
	2013년	고령화 사회 (7%~)	고령 사회 (14%~)	초고령 사회 (20%~)
독일	21.1	~1984	1985 ~2007	2008~
이탈리아	21.1	~1987	1988 ~2007	2008~
일본	25.1	1970 ~1994	1995 ~2005	2006~

자료: UN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분.
주: 고령화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

< 고령 단계별 경제 성장률 >

(%)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금융위기 제외
독일	-	2.1	0.7	1.9
이탈리아	-	1.7	-1.4	-0.6
일본	3.8	1.1	0.6	1.4

자료: IMF, 세계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금융위기 제외는 2009년을 뺀 평균임.

1) 첨부 1. OECD 국가의 고령화 정도 참조.
2) UN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은 고령 사회가 1972~2008년이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1985년까지 고령화 비중이 하락하면서 독일 정부 기관 및 연구논문에서는 1985년을 고령 사회의 시작 시점으로 보고 있음.

○ 초고령 사회 진입에도 독일의 재정 건전성과 대외 경쟁력은 오히려 상승

-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초고령 사회 들어 개선됐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낮았음
  · 독일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고령 사회 -2.9%에서 초고령 사회 -1.3%로 개선된 반면, 일본은 -6.0%에서 -7.1%로, 이탈리아도 -2.9%에서 -3.7%로 상승
  · 독일은 GDP 대비 국가부채도 고령 사회 평균 57.8%에서 77.1%로 낮게 유지됐지만 일본은 142.0%에서 212.2%로, 이탈리아도 107.3%에서 120.3%로 급등

- 독일은 자동차, 화학, 일반 기계 등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3]하면서 2006년 무역 2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경쟁력도 높게 유지
  · 독일의 무역규모는 1995년 987억 달러에서 2013년 2.6조 달러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동기간 연평균 3.9%, 4.6% 증가함. 특히 이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독일과의 격차가 확대
  · 독일은 1995~2013년 평균 경제성장률(2009년 제외)이 1.7%인데 내수 기여도뿐만 아니라 순수출의 기여도도 0.7%p로 일본, 이탈리아에 비해 높았음

○ 이에 독일이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경쟁력을 높인 비결을 다른 초고령 국가인 일본, 이탈리아와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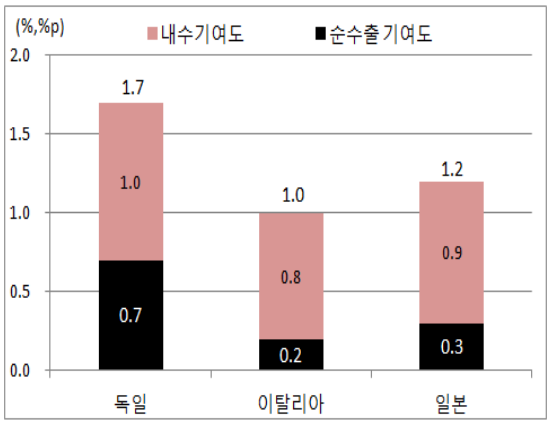
< 고령 단계별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

(기간 평균, %/GDP)

구분	국가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재정수지	독일	-2.9	-1.3
	이탈리아	-2.9	-3.7
	일본	-6.0	-7.1
국가부채	독일	57.8	77.1
	이탈리아	107.3	120.3
	일본	142.0	212.2

자료: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독일은 통일로 인한 데이터 분절로 고령 사회가 1991~2007년 평균임.

< 경제 성장에 대한 내·외수 기여도 >



자료: OECD.
주 1)1995~2013년 평균이며, 금융위기였던 2009년은 제외.
2)일본은 2012년까지 평균임.

3) 독일 무역의 꾸준한 증가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가 2012년 기준 703개로 일본 231개, 이탈리아 228개에 비해 많은 등 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임. 국제무역연구원,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2013년.

2.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 **(비교 방법) 독일의 고령화 대응 방안을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성 및 정부로 구분하여 고령화 단계별로 일본, 이탈리아와 비교**

- 초고령 사회 3개국을 노동 투입(인구 유입, 고용), 자본 투입(투자 여력, 투자 유입), 생산성(기술, 제도) 및 정부(복지 공급, 수요 창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

< 고령화 대응방안 비교 >

대구분	소구분	비교 지표
노동 투입	고용	- 고용률, 성/연령별 고용률
	인구유입	- 이민자 비중, 이민 정책
자본 투입	투자 여력	- 가계 저축률
	자본 유입	- 외국인 투자 유입
생산성	기술	- R&D투자 증가율
	제도	- 투자 환경 경쟁력 평가
정부	복지 공급	- 복지지출 규모, 조세 부담률
	수요 창출	- 시장 확대, 신시장 창출

1) 노동 투입

○ **(고용 확대) 독일은 고용 개혁과 연금 수급 시기 상향등으로 고령자와 여성 노동력의 고용 시장 진입을 확대시킴**

- **독일은 고용 개혁[4]을 통해 시간제 등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
  -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778만개에서 2012년 1,039만개로 꾸준히 증가
  - 독일은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2007년에 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63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한 달씩 수급 시기가 늦춰져 2023년에는 66세, 2029년 67세로 상향 예정

- **고용·연금 개혁 등으로 독일의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률은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노동력 활용이 제고됨**
  - 독일의 고용률은 고령 사회 기간 64.9%에서 초고령 사회 71.7%로 6.8%p 상승했는데 이는 이탈리아 3.1%, 일본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4) 2003년 당시 독일 슈뢰더 정부는 낮은 경제 성장, 높은 실업률 등을 개선하기 위한 '아젠다 2010'의 경제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고용 시장 개선 방안은 기간제·단시간 근로 조건 및 해고보호법의 적용범위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했고 고용 유형 다변화, 직업 훈련 과정 개선 등도 포함.

· 특히, 독일의 고용률 상승은 하르츠 개혁을 통한 고용 유연성 제고 등으로 고령자와 여성 고용을 19.5%p, 11.2%p 높인데 기인

< 은퇴 및 연금 수급 개혁 >

	연금 수급 나이	비고
독일	65세 (2007년)	-2007년 63세→65세로 상향 -2023년 66세, 2029년 67세로 연금 수급시기 상향
이탈리아	66세 (2013년)	-여성 62~63세, 남성 66세에서 2018년까지 66세로 통일 -2021년까지 67세로 상향
일본	65세 (2012년)	-2030년까지 모든 연금 개시 나이를 65세로 통일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 고령 단계별 고용률 변화 >

(%)

	전 체		여성		고령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독일	64.9	71.7	55.5	66.7	39.2	58.7
이탈리아	54.0	57.1	39.2	46.6	29.9	37.9
일본	69.1	70.8	57.1	60.4	63.2	66.1

자료: OECD, Eurostat.
주1) 여성은 15~64세, 고령자는 55~64세임.

○ **(인구 유입) 독일은 출산률 하락[5]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실시**

- **독일은 총인구 중 이민자 비중이 13%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고학력·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도 강화**

· 독일은 총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이 2010년 13.1%로 이탈리아 7.4%, 일본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이민자 유입을 통해 생산 인력 감소에 대응

· 최근에는 '고학력자의 이민을 쉽게 하는 EU 지침' 2012년 8월부터 시행하였고, 2013년에는 전문가 이니셔티브(The Qualified Professionals Initiative) 정책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총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 >

(단위: 천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독일	593.6 (7.5)	899.2 (11.0)	998.1 (12.2)	1,059.8 (12.9)	1,075.8 (13.1)
이탈리아	142.8 (2.5)	172.3 (3.0)	212.2 (3.7)	306.8 (5.2)	446.3 (7.4)
일본	107.6 (0.9)	136.3 (1.1)	168.7 (1.3)	199.9 (1.6)	217.6 (1.7)

자료: U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08.
주: ( ) 는 총 인구 중 비중임.

5) 독일 출산률은 1970년 2.03명에서 1990년대 중반 1.24명으로 떨어졌고 이후 가족복지 강화에도 2000년대 이후 1.4명대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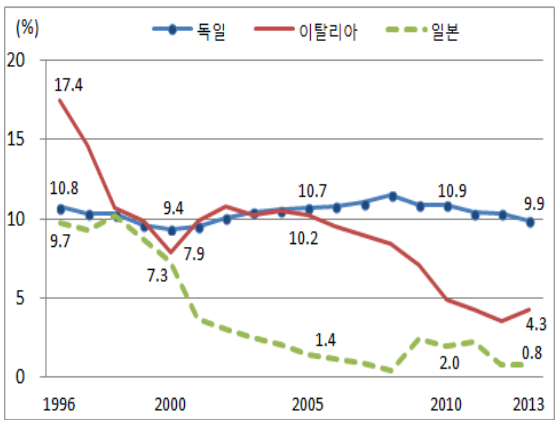
2) 자본 투입

○ **독일은 고령화에도 가계 및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게 유지됐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증가**

- **(투자 여력 확충) 독일은 투자 자본이 되는 가계의 저축률이 높게 유지[6] 됐고 기업의 자본도 확충되면서 안정된 투자 여력을 확보**
  - 독일의 가계 순 저축률은 초고령 사회 후에도 9~10%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일본과 이탈리아는 2000년 이후 급락하며 2013년 기준 0.8%, 4.3%를 기록
  - 독일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율도 2000년 19.0%에서 2012년 27.5%로 8.5%p 높아지면서 장기적 관점의 안정된 투자 여력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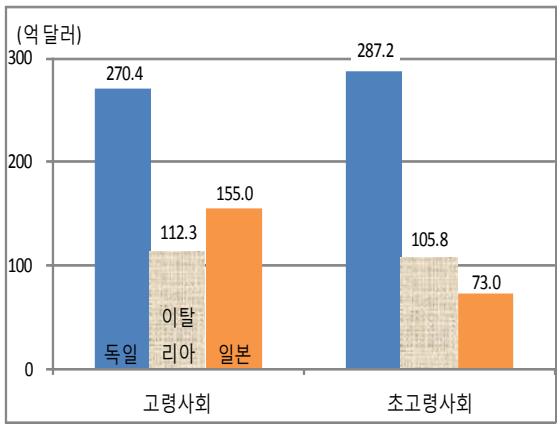
- **(자본 유입 확대) 독일은 유럽 내 최대 시장이며 제조업과 R&D의 경쟁력 등도 꾸준히 제고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
  - 독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금액은 고령 사회 평균 270.4억 달러에서 초고령 사회 287.2억 달러로 6.2% 증가했지만 이탈리아는 112.3억 달러에서 105.8억 달러로 5.7%, 일본도 155.0억 달러에서 73.0억 달러로 52.9% 감소
  - 2000~2012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유입 금액도 독일은 6,274억 달러로 이탈리아 2,285억 달러, 일본 1,738억 달러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았음

< 가계 순 저축률 추이 >



자료: OECD.
주: 가계의 순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임.

< 고령 단계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



자료: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2년까지 기간 평균임.

6) Mackinsey(2005), KDI(2006), 성명기(2009) 등은 고령화가 피부양인구 비중의 증가 등으로 저축률 하락과 투자 감소로 연결된다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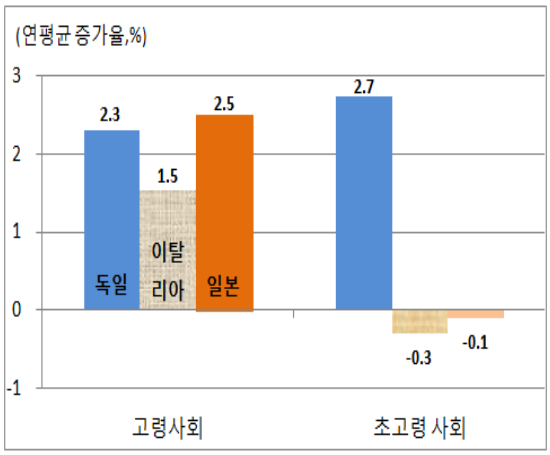
3) 생산성

○ **독일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R&D, 인력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투자 환경 등 제도도 개선**

- **(기술 경쟁력 제고) 독일은 R&D와 인력 교육에 대한 투자가 초고령 사회에도 꾸준히 확대**
  - 독일의 R&D 투자는 고령 사회 연평균 2.3% 증가했고 초고령 사회는 2.7%로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일본은 2.5%에서 -0.1%, 이탈리아도 1.5%에서 -0.3%로 감소
  - 독일은 2003년 고용 개혁을 통해 노동청의 현장 실습형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
  - 이에 독일의 노동 생산성(노동 시간 당 실질 GDP, 달러 PPP 기준) 증가율은 고령 사회 연평균 2.1% 증가해 일본 1.9%, 이탈리아 1.1% 보다 높았고, 초고령 사회 이후에도 연평균 0.4% 상승

- **(제도 개선) 독일은 법인세률을 인하하고 인프라, 혁신 능력 등 투자 환경의 경쟁력도 높게 유지**
  - 독일은 2007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률을 39%에서 29%대로 낮췄고 고용보험요율도 6.5%에서 3.3%로 하향 조정 하는 등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
  - 또한, 독일은 인프라, 혁신 능력, 인력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일본, 이탈리아 보다 투자 환경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음

< 고령 단계별 R&D 투자 증가율 >



자료: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2년까지이며, 실질 달러 기준임.

< 투자환경 경쟁력 비교 >

	독일	이탈리아	일본
법인세	29.6%	31.4%	38%
전반적 인프라	10위 (6.2)	53위 (4.8)	14위 (6.0)
혁신 능력	3위 (5.6)	31위 (4.2)	6위 (5.6)
연구 및 인력교육 서비스 접근성	2위 (6.1)	32위 (4.8)	12위 (5.5)
금융서비스 접근성	17위 (5.7)	71위 (4.5)	31위 (5.3)

자료: WEF, KPMG Global Tax.
주: ( )는 경쟁력 지수로 1~7 범주이며, 7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의미.

4) 정부

○ (복지 체계 개선) 독일 정부는 2003년 이후 고용·연금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도 달성

- 독일은 고용·연금 개혁을 통해 과도한 복지 축소, 고령자의 연금 수급 시기 분산 등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 독일 정부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1980년 22.1%에서 2009년 26.2%로 4.1%p 상승했지만 일본과 이탈리아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동기간 12.0%p, 10.4%p 늘어남
  · 부분별로는 독일의 고령자에 대한 GDP 대비 복지 지출은 1980년 9.7%에서 2009년 9.1%로 -0.6%p 감소했지만, 일본과 이탈리아는 7.4%p, 5.8%p 증가
  · 특히, 독일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족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 효율성을 제고

- 이에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 이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빠른 고령화에도 80년대 이후 30% 중반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1980년 29.7%에서 2011년 44.4%로 14.7%p 급등했고 일본도 동기간 3.8%p 증가

< 분야별 복지 지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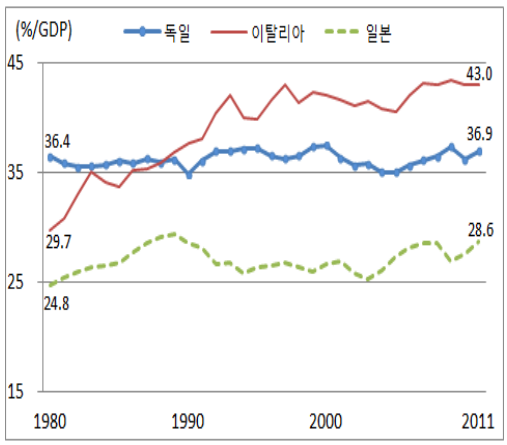
(%/GDP, %p)

	전체	고령자	의료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독일	22.1→26.2 (4.1)	9.7→9.1 (-0.6)	6.6→8.6 (2.0)	2.0→2.1 (0.1)	0.5→1.0 (0.5)
이탈리아	18.0→28.4 (10.4)	7.2→13.0 (5.8)	5.5→7.4 (1.9)	1.1→1.6 (0.5)	0.2→0.4 (0.2)
일본	10.3→22.3 (12.0)	3.0→10.4 (7.4)	4.4→7.2 (2.8)	0.5→1.0 (0.5)	0.3→0.4 (0.1)

자료: OECD.

주1) 1980년과 2009년 GDP 대비 지출 규모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은 1990년 2009년임.
2) ( )는 시작 시점 대비 증감임.

< 조세부담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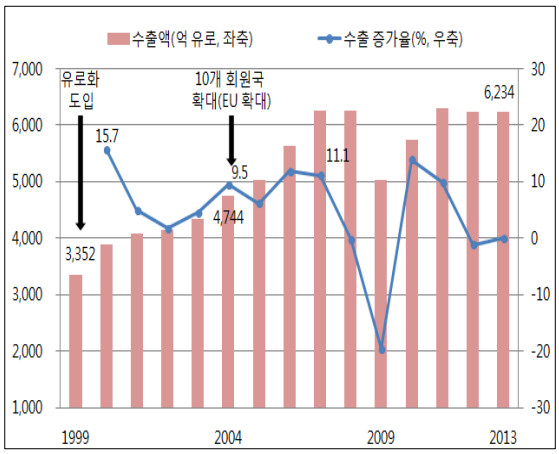
자료: OECD.

○ (新수요 창출) 독일은 EU 통합 강화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였고, 고령화도 新시장을 창출하는 성장 동력으로 인식

- (EU 통합으로 시장 확대) 독일은 EU 통합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Advocate)로서 단일 통화 사용, 회원국 확대 등으로 수출 시장을 꾸준히 확대
  · 독일의 EU 28개국으로의 수출액은 1999년 3,352억 유로에서 유로화 도입(1999년), EU 회원국 확대(2004년) 등으로 2013년 6,234억 유로로 86.0% 증가
  · EU 경제 통합 강화로 유로존 17개국에 대한 수출은 1999년 2,357억 유로에서 2013년 4,025억 유로로 70.8% 증가했고, 비 유로존 국가에 대한 수출도 동기간 996억 유로에서 2,209억 유로로 2.2배 증가하였음

- (新성장동력 창출 전략 추진)독일은 고령화를 새로운 일자리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실버 경제(Silver Economy)'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
  · 실버 경제는 2005년 독일 본(Bonn)에서 유럽의 삶의 질,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자 EU차원에서 도입된 개념임
  · 실버 경제는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자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예를 들어, 제조업은 고령자의 생활 편의, 건강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 산업, 전자동 자동차, 헬스 케어 등에 서비스업은 ICT와 결합을 통해 고령자에게 삶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

< 독일의 EU 27개국으로 수출액 추이 >



자료: Eurostat.
주: 1999년은 유로화 도입, 2004년은 EU 회원국이 10개국 확대됨.

< 실버 경제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도입	- EU 차원에서 2005년에 도입
과제	- 행복한 노후 - 고령자의 적극적 고용기회 - 고령자의 기술숙련 개발과 평생 교육 등 5대 과제
행동 영역	- 고령자의 독립적 삶 지원 (주거, 건축, 통신 등) - 홈 베이스 서비스와 쇼핑, 건강, 금융 서비스 등

자료: EU 실버 경제 네트워크.

3. 시사점

○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초고령 사회인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법을 부문별로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고령화에 공급/수요의 양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유지**
  · 독일 정부는 고용·연금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복지 지출의 효율성 제고했고 수요 창출자로서도 EU 통합 강화, '실버 경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UN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직면**
  · 한국의 고령화는 2013년 12.2%이나, 2018년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 이후에는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 **첫째, 투입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함**

- **(노동 투입) 고령자, 여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고숙련·전문 인력의 유입 정책도 재정비**
  · 고령자와 여성이 고용 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공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강화
  · 또한, 해외 고숙련·전문 인력들의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보완도 필요함

- **(자본 투입)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경제 전반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 등도 개선**
  · 지출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면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저축기반이 확충되면서 경제 전반의 투자 여력을 제고될 수 있음[7]
  · 국내외 투자를 꾸준히 유인할 수 있도록 세제, 인프라, 인력 및 R&D 환경,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생산성)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자·여성 등에 대한 직업훈련도 다양화**

7) 지출 여력이란 해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추가 지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잉여재원으로,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이나 투자를 뺀 것임, 한국은행, '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BOK 이슈 노트, No.2013-2.

· 세계 최고의 GDP 대비 R&D 지출에도 기술 경쟁력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는바 기술 이전 체계 보완, 산학연 협력 강화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또한, 고령자, 여성의 숙련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 훈련도 다양화해야 함

○ **둘째,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 확대 및 新시장 창출 노력이 필요함**

- **(시장 확대) EU 통합이 독일의 시장 확대로 연결된 만큼 양자 FTA, 범 지역 FTA인 TPP의 적극적 활용으로 해외 시장을 꾸준히 개척해야 함**
  ·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양국간 FTA 및 범지역 FTA 참여로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야 함

- **(新시장 창출) 고령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한국형 실버 경제' 모델을 마련**
  · 고령 관련 일자리를 통해 고용 규모를 확대하고 고령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국내외 시장을 확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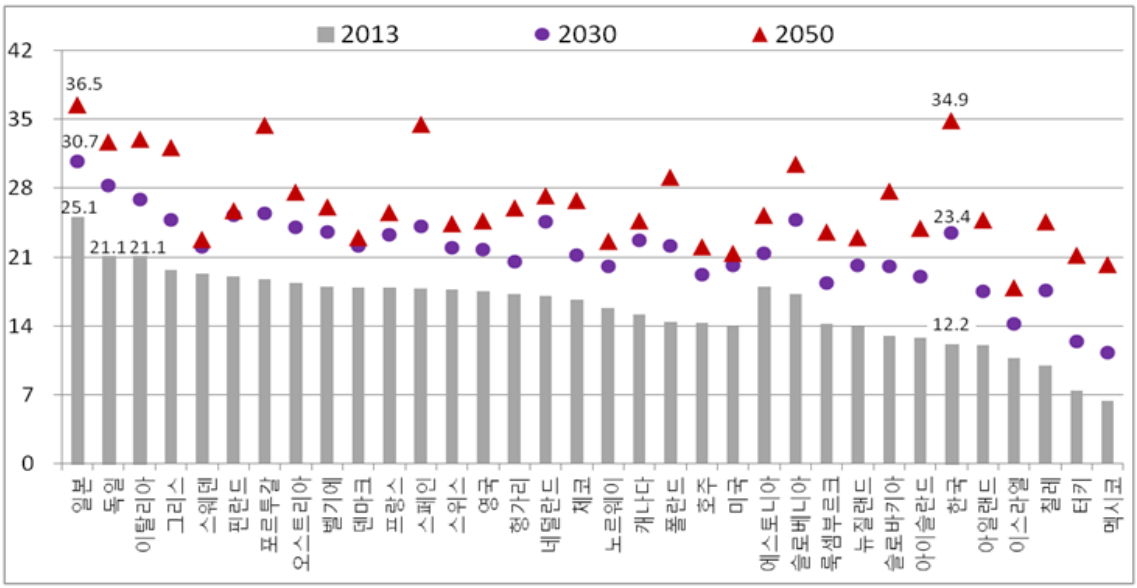
○ **셋째, 정부 부문에서는 복지 체계 개선, 일자리 및 조세 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복지 체계 개선)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
  · 일자리 복지 확대와 고령화 정도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의 확대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함
  · 특히, 집행된 복지도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재정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

- **(사회적 합의 도출)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및 적정한 조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도출도 필요**
  · 지속 성장을 통한 재정 규모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나 공공복지 수요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고 OECD 고령 국가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격차가 큰 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설득 과정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일자리 유지 기간이 길수록 정부의 복지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적정 은퇴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도출도 필요함

조호정 선임연구원(02-2072-6217, chjss@hri.co.kr)

<첨부 1> OECD 국가의 고령화 정도와 미래 예측



자료: UN 인구통계, 현대경제연구원.
주: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의 비중이며, 중간(Median) 출산률을 적용하여 추정.

<첨부 2> 독일 하르츠 개혁의 주요 내용

-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2003년 1월부터 2005년까지 Ⅰ~Ⅳ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

·주요 내용은 실업자 감축을 위한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연방노동청의 일자리 매칭 강화,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와 사회부조의 급여 축소 등이 포함

<하르츠 개혁의 주요 내용>

개혁시기	내 용
Ⅰ (2003년)	-고용중개청(Personal Service Agenture; PSA) 설립 -노동청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Ⅱ (2003년)	-MiniJob, MidiJob 등 새로운 고용 유형 창출 -고용 확대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Ich-AG(자기 주식회사) 시행
Ⅲ (2004년)	-노동청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잡 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
Ⅳ (2005년)	-장기실업급여 기간을 12개월로 축소 -복지급여 축소, 실업 급여도 최저임금 이하로 축소

주: 개혁 당시, Minijob(미니잡)은 월 400유로 이내, Midijob(미디잡)은 월 400-800유로 이내의 저임금 일자리임.

<참고자료>

김미숙 외, 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대외경제연구원,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10-25
현대경제연구원,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경제주평 통권 548호, 2013년 7월
현대경제연구원,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 VIP리포트 통권 543호, 2013년 10월
국제무역연구원,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2013년.
한국은행, 고령화 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BOK 이슈노트, 2013년 2월.

CSIS, Germany and the Challenge of Global Aging, 2003, 3.
Mackinsey&Company, The Coming Demographic Deficit, 2005.
GEROBILM, 'Silver Economy' in Germany- More than only the 'Economic Factor: Old Age!', 2009.
A.Sutrisno and O. Handel, Dynamic Aging Population in Germany, Univ. Bergen, 2011
European Policy Center, Healthy and active Ageing: Turning the 'Silver' economy into gold, Policy Brief, 2012.
독일연방내무부, Demography Report, 2012
Accenture, The Seven Myths of Population Aging, 2012. 2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UN 인구 데이터(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OECD 통계(stats.oecd.org)
유럽 통계청(Eurostat)
독일 통계청(www.destatis.de)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5월 8일	5월 1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62	2.49	-0.13%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1.86	101.58	-0.28￥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912	1.3710	-0.0202$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551	16,447	-104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164	14,298	13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5	2.83	-0.02%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22.6	1025.3	2.7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50.6	2,010.2	59.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5월 8일	5월 1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0.19	101.50	1.31$
	Dubai	107.99	100.38	107.88	104.09	105.78	1.69$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6.84	307.78	0.94$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8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7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5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370
	수 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 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